Post-2015 국제개발협력 체제 *

김 용 택
(전남대학교 초빙교수)

1. 들어가며

국제사회는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끝나게 되면서 2015년 이후 전개될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방향과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개발의 체제를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UN은 시스템 작업팀(UN System Task Team)을 구성하고, Post-2015 개발협력의 비전, 핵심 원칙과 주요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의 방향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UN의 지속가능발전 총회(Rio+20)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수립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지난 MDGs가 지닌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MDGs의 주제였던 보건, 교육, 빈곤 이슈를 넘어서 MDGs에서 다루지 않았던 환경, 성 평등 및 거버넌스 등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는 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도 국제개발협력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로서 Post-2015의 비전, 핵심 원칙, 주요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논의해 왔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이 같은 노력은 최근 Post-2015 글로벌 개발협력의 체제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 개요 보고서[1]에 잘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OECD가 정리 보고한 보고서

* (yongkimus@gmail.com).

표 1 Post-2015 개발협력의 체제에 관한 주요 논의 과정

연도	주요 사항	주요 결과물
2010. 9	제 65차 UN총회 – UN 사무총장에게 Post-2015 개발 의제 구상 촉구	결의문(A/RES/65/1) 채택 • "Keeping the promise: united to achieve the MDGs", para. 81
2012. 1	UN System Task Team 운영 개시 – 목적: 새로운 의제 방향 설정 및 주제별 논의 개시	주요 보고서 • "Realizing the Future We Wang for All(2012. 5)" : 기본원칙, 프레임워크 • "A Renewed Glov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2013. 3)" : MDG 8을 보완하는ㄴ 이행 파트너십 •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2013. 7)" : 지표 및 모니터링 요건
2012. 6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Rio+20) 개최	• 결과문서 "The Future We Want" 채택 – SDGs 수립 합의 • OWG 구성(2013. 1), 종합보고서 제출 예정(214. 9)
2012. 7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HLP) 발족 – 구성: Cameron 영국총리, Yudhoy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포함 27명의 세계 저명인사 포함(우리나라 김성한 전 외교부 장관 참여)	A New Glov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c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보고서 발표(2013. 5)
2012. 8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구성 – 구성: Jeffrey Sachs 교수가 학계, 시민단체,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	주요 보고서 •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13. 6) • Indicators for SDGs(2014. 3)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동향 및 시사점, 2014.

"Post-2015 글로벌 개발협력의 체제"을 소개함으로써 Post-2015 논의에 관한 OECD의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OECD는 과거 MDGs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향후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 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보고서는 OECD가 Post-2015년을 위하여 작성한 사전제안서와 같은 성격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기획하는 각국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OECD는 동 보고서를 통하여 가능한 모든 OECD 회원국,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들을 Post-2015년 개발목표의 설정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한다. OECD가 최근 논의한 "개발에서의 OECD 전략(OECD Strategy on Development)"에서 반영된 것처럼, OECD는 Post-2015년 개발목표의 설정과정에 회원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이 최대한 참여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OECD는 상호학습을 통한 자국의 개발소유권을 존중하고, 전문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며, 개발에 관한 일관된 접근방식을 추구한다고 확약한 바 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새로운 개발협력의 체제를 구성하는 11개 요소를 제시하였

1) 보고서는 OECD의 Beyo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wards an OECD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agenda임.

다. 동 보고서는 글로벌적이며 총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의미 있는 개발협력의 체제 제공과 이를 위한 2개 차원 즉 국내 차원과 국제 차원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차원은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가 적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들 간 서로 다른 출발점과 배경 및 우선순위와 역량을 조정하려는 목적, 목표, 지표 등을 고려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예비적 제안서 성격으로 OECD가 새로운 개발협력의 체제를 본격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11개 요소들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OECD의 다른 이사회와의 공동 작업에 더욱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2.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목표

UN의 MDGs란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8개의 개발목표를 일컫는다. OECD는 보고서 "21세기를 이루는 것(Shaping the 21st century)"(OECD, 1996)을 통하여 MDGs를 정의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OECD는 MDGs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지만 갈등이 심한 "취약 국가"[2)]에서는 개선이 매우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

2000~2001년 MDGs가 정해진 이후 시대가 크게 변하였다. 부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빈곤 완화, 사회 발전, 발전에 대한 인식과 측정 등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 새천년의 첫 10년은 국가 간 1인당 소득격차가 빠르게 줄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빠른 소득증가로 국가 간 일인당 소득격차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개발도상국의 빠른 성장과 함께 이질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소위 '북과 남의 구분(North-South division)'은 과거 개념이 되고 말았다. 또한 빠른 성장에 대한 대가로 지속가능성과 환경비용에 관한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성장은 최빈곤층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MDGs의 첫 번째 목표인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를 절반까지 줄이려는 목표는 무사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UN의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최빈곤층의 비중이 1990년 47%에서 2010년 22%까지 하락하였다(UN 2012b).

향후 Post-2015년 개발목표의 체제에서 논의할 새로운 관점은 다음과 같다.

- 성장에 대한 새로운 입지적 관점: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OECD 국가로부터 신흥국

2) 취약국가란 외부의 위기적 상황과 충격을 방치하는 국가 역량과 합법성이 매우 약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력적 갈등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고 때로는 자원의 저주(natural resource curse)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라를 일컬음.

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균형에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들은 새천년 시작 이후 OECD 성장을 넘어서고 있고 세계 GDP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성장 엔진과 남남의 연계(South-South linkages)의 출현 역시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활력으로 말미암아 개발도상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 새로운 운영주체(New actors)와 새로운 자원: 새천년은 운영주체들이 다양한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글로벌 개발협력은 공공재원 외에도 민간재원까지 포함한 재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 상호의존성의 심화: 전 세계는 상호연계성이 더 높아진 신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성장과 포괄적 녹색성장과 같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기후변화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하지 않는 이용에 대하여 대응해야 하며, 금융안정을 회복하고, 더 나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 새로운 빈곤 지역의 출현: 새로운 성장 지역이 출현했다는 의미는 새로운 빈곤지역이 출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최빈곤층은 중간소득(middle-income)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최빈곤층은 2015년까지 다시 "취약 국가"로 불리는 저소득국가에 출현할 것이다.
- 성장 불균형: 성장, 사회응집력과 정치적 안정 측면에서 선진국,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에서 불균형이 더 확대되는 현실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소득분배와 상대적 빈곤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최빈곤층을 빠져 나온 대부분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안전망도 미흡한 상태이다.
- 광범위한 개발의 측정: 발전의 유효한 측정기준으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와 총국민소득(GNI)이 유용한지 줄곧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대안은 국민계정에서 자연자본과 사회 자본을 보다 잘 반영하고 복지의 비화폐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발전의 측정지표를 찾는 것이다.
- 국가와 현실여건에 적합한 접근 방식: 글로벌 협상과 글로벌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개별국가들의 사회적 요구와 우선순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각 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과제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과에 대한 압력: 상호 연계된 다양한 글로벌 위기로 인하여 정부 예산을 더욱 긴

축 운용하고 효율성을 높여야만 했다. 각국의 정부는 투입 대신 산출이나 성과 측정에 주력하고 있다. 새천년선언과 MDGs는 전 세계의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주어진 기한 내에 측정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에 집중한 것이다. OECD는 새롭고, 의욕적이고, 간결하고, 성과지향적인 체계를 확립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각국 정부는 새로운 체제를 현재 목표 위에 세울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목표를 다시 설정할지를 정해야 한다.

3. Post-2015 개발협력 의제 관련 OECD 아이디어

OECD는 전 세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evidence based policies)을 권고한다. OECD는 Post-2015 개발협력의 체제를 논의함에 있어 기본원칙으로 글로벌해야 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가능(global, holistic and measurable)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3.1. 글로벌적 관점, 총체적 의제, 측정 가능한 개발목표

3.1.1. 글로벌적 관점

개발도상국의 관점을 넘어서 글로벌 관점을 취해야 한다. 과거의 북·남의 구분(North・South division)는 신흥경제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세계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는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도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인구 관리와 도시 개발, 기후변화 완화, 자연자본 보호, 남녀평등과 여권(女權)향상 촉진, 전염병 예방, 평화와 안정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의 상호연관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종종 국가정책의 효과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Post-2015 개발협력 체제의 목표는 문제와 해결책이 세계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모든 국가들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응해야만 하는 과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Post-2015 개발협력의 체제는 모든 국가에 적절해야 하고,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국가가 책임을 공유하는 진정한 글로벌 개발협력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3.1.2. 총체적 의제

의제에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뿐만 아니라 현재 MDGs의 빈곤과 인간개발 의제도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논의한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목표들을 하나로 묶고 이는 하나의 포괄적이면서 일관된 의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체제는 보다 좋은 삶의 질을 표현하는 다른 측면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평균적 의미의 발전 지표를 넘어서 사회자본과 자연자본 및 복지와 같은 개념을 측정할 수 있고,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 정도를 확인·점검하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적 접근은 참고기준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남녀평등과 여권증진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른 목표의 달성이나 권리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3.1.3. 측정가능하고 의미 있는 추진

개별국가들이 스스로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설정해야 한다. 데이터와 통계시스템이 없이 목표만을 설정할 경우 전혀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목표는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한다. 목표는 개별국가의 현실과 우선순위를 잘 반영해야한다. 예를 들어, 갈등과 분쟁을 겪는 국가들은 MDGs 달성이 매우 어렵다. 이들 정부들은 정치 참여, 안보, 정의와 같은 핵심 요인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MDGs에 점점 비판적으로 변하고 있다.

3.2. 2개 차원의 접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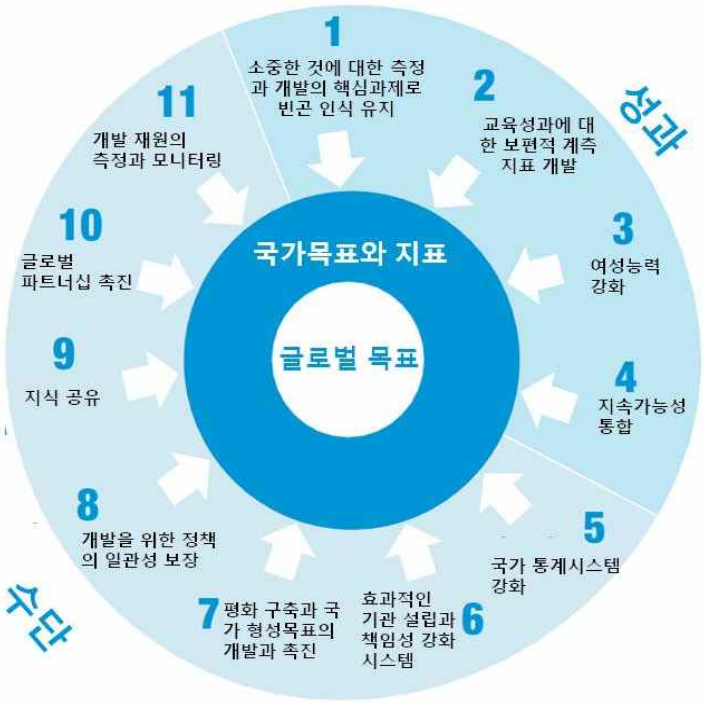
어떻게 이들 원칙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가? OECD는 목표 설정을 위하여 2개 차원의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접근방식은 전 세계의 합의를 반영하여 작은 규모의 글로벌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개별국가들이 글로벌 목표를 자국의 개발, 배경, 구체적인 책임과 역량 수준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정하는 것이다. 이들 2개 차원의 접근방식에는 성 평등을 포함하여 평등 과제가 고려되어야 하고, 가능한 성별 데이터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점검하는 방법과 수단은 2010년의 MDGs 고위급 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국가리더십을 위한 정책 논의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글로벌 차원이나 국가 차원 모두에서 목적과 목표는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와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목적 달성의 수단과 방법 등과 같은 관련 정책수단들, 기타 “가능한 조치들”, 개별국가들의 통계적 능력지표 등을 포함하여 시설점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제안의 구체화 – 11개 아이디어의 실현

Post-2015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OECD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로 목적과 같은 성격의 성과와 둘째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툴과 관련된 11개 요소를 제안하였다.

그림 1 OECD "Post-2015 개발협력의 체제"의 수단과 성과



4.1. 성과는 미래의 개발 목표 강조

4.1.1. 소중한 것에 대한 측정과 개발의 핵심과제로 빈곤 인식 유지

MDGs의 첫 번째 목표인 최빈곤층의 근절은 일부 달성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빈곤을 다르게 정의하면서 미래도 다르게 전망하게 되었다. 2012년 UN의 MDGs 보고서는 14억 인구가 여전히 절대 빈곤상태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다차원 빈곤지수(MPI)에 의하면 16억 5,000만 인구가 절대 빈곤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빈곤을 보다 다각적으로 보면 소득증가나 물질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 건강, 교육, 안보, 오염 되지 않은 환경, 깨끗한 물, 지역사회의 지지, 효율적이고 부패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기본수요의 충족도 소득 증가나 물질 조건과 같이 주요 요인이다.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 또한 필수적 요인이다.

빈곤을 보다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기준을 넘어서 상대적 빈곤과 같은 분배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Post-2015 개발의제의 핵심에 "웰빙(well-being)"이란 보다 넓은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탄이 주도하고, 2011년 7월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결의 65/309에서 지속가능한 행복과 웰빙을 촉진하는 "발전의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채택되었다. 회원국들은 공공정책과 개발정책에서 행복과 웰빙 추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지표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2012년 4월 뉴욕에서 이루어진 후속고위급 회의에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정의하는 차원에서 행복과 웰빙의 계측을 새로운 계측 의제로 정하였다. 웰빙이란 복잡하고 다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OECD의 "더 나은 삶의 주도"는 UN이 요구하는 새로운 웰빙 측정 방식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개념이다. 보고서 "삶은 어떠한가?"에서 시도한 이런 접근방식은 모든 국가에 적절한 체제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불평등과 평균적 성과를 고려하는 11개 요소가 포함된다<그림 1 참조>. 이 체제는 오늘과 미래의 웰빙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보다 바람직한 측정지표로 강조된다.

이상의 모든 관점이 OECD의 웰빙 체제(OECD 2011)에 포함된다. 이러한 체제는 그동안 주로 전 세계의 부유층에만 적용되어왔지만, 이제 신흥경제국까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지역회의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 같은 다양한 웰빙 측면이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는 상관없이 전 세계에 잘 적용됨을 밝혔다. 웰빙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관점과 지표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대부분의 웰빙 주도 사업에 공통의 기반을 제공한다.

4.1.2. 교육성과에 대한 보편적 계측 지표의 개발

Post-2015 개발협력의 체제에서 교육과 관련된 목표는 아마도 학습의 질과 형평 및 중등교육에 집중될 것이다. 이런 추세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국제적 척도를 통하여 학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개발하는 주요 과제를 갖게 될 것이다. OECD는 국제적으로 학생평가 프로그램(PISA)에서 구축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과제에 잘 기여할 것이다. OECD가 개발하고 2000년에 처음 실시된 PISA는 교육의 학습 성과

(수리적 지식, 언어적 지식, 과학) 중에 가장 광범위하고 엄격한 국제평가를 제공한다. PISA는 약 70개국에서 3년마다 50만 명에 이르는 15세의 학생들을 테스트한다. PISA는 테스트 시행과 동시에 학생, 학교,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과 형평성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협력국들은 PISA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28개국에 이르는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 국가들이 참여하였다.

이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OECD는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이 PISA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위한 PISA(PISA for development)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PISA 조사도구를 개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위한 PISA의 정책적절성 개선이 목적이며 주요 PISA 평가와 같은 척도인 점수로 평가된다. 2015년 PISA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이 증가했다는 것은 PISA가 잠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육 개선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는 PISA에서의 경험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위한 정책 분석을 활용하여 Post-2015 교육목표를 개발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UNESCO의 학습척도작업팀(UNESCO's Learning Metric Task Force) 및 다른 관련 포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4.1.3. 남녀평등과 여권 부여의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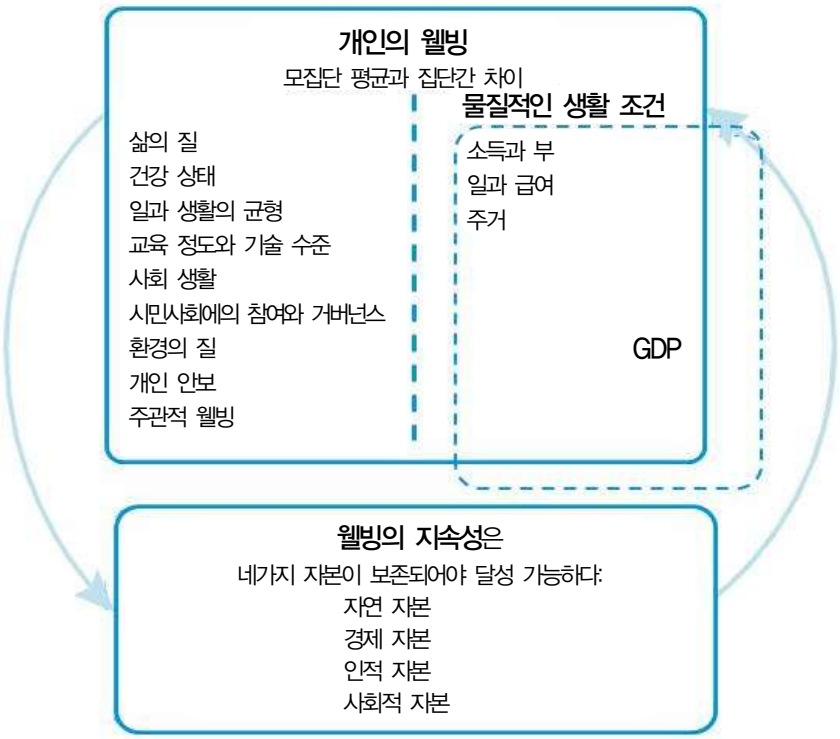
모든 국가에서 여성과 소녀의 삶이 획기적으로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OECD의 2012년 보고서인 「성별 격차해소: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라(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는 모든 나라에서 남녀평등이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강력하고도 지속적이며 균형 잡힌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OECD 개발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차별은 유아 건강, 산모사망률, 교육수준 등과 같은 핵심 개발지표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Post-2015의 개발의제는 남녀평등에 있어 두 가지 접근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식은 남녀평등과 여권 증진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여성의 경제력 증진과 자산의 소유권, 여성의 리더십, 재생산적 건강서비스 접근, 어린 여성의 교육의 질 달성 및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의 역할 등과 같은 필수적인 분야를 측정하는 관련 개발목표에 여성과 관련된 목표와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UN은 Post-2015 개발 의제에 "발전과 성 평등과 여권 향상" 분야에 OECD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OECD의 많은 보고서들은 차별적인 사회기관과 성 평등지수 측정을 다루고 있다.

4.1.4. 개발과 지속가능성의 통합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부에서 천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6%를 차지하나(OECD의 경우 2%),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천연자산은 웰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원과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현행 성장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이다. 녹색성장의 목표는 웰빙을 위한 주요 자원과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경제성장도 촉진시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녹색성장의 사회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이 중요하다. OECD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OECD의 녹색성장전략은 여러 국가들이 녹색성장 방식을 적용하여 축적된 광범위한 경험을 요약한 것이다. 현재 OECD는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들과 이들 개발도상국들의 경험과 증거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자문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보고서 "녹색 성장을 개발(발전)의 핵심으로"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정책과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개도국의 빈곤해소 중심의 성장전략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이슈 중에 핵심적인 이슈의 하나로 빈곤 완

그림 2 OECD의 웰빙과 진보 측정 체계



화와 자연자원 관리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전략의 부분으로 OECD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녹색성장의 지표를 개발 응용하는데 있어 많은 협력기관과 여러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표와 측정 툴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의제가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작업은 GDP 개념을 넘어 웰빙과 발전을 계측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OECD의 활동과 연계 통합되어있다(1 요소). 또한 OECD는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통합 환경-경제계정시스템(SEEA)"의 개발과 시행이다. 통합 환경-경제계정시스템은 환경 통계와 경제 통계를 통합하는 국제기준으로 2012년 UN통계국이 인준한 시스템이다. 또 다른 예로는 녹색성장지식플랫폼(GGKP)으로 녹색성장지식플랫폼(GGKP)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은행(World Bank)이 협력하는 다자협력프로그램이다. 이런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는 향후 관련 국가들이 녹색성장정책을 측정, 계획, 시행함에 있어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4.2. 미래 목표를 개발·성취하기 위한 도구

세계 경제의 상호 연계된 과제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 조정을 요구한다. 경제적 외부 충격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기후변화, 금융 불안정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는 전 세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Post-2015 개발협력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포용적(inclusive)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을 잘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UN이 왜 MDGs 이후의 개발협력 체제를 위한 수단과 목적을 정의할 수 있는, "개발 가능요소"의 조합을 확인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OECD는 개발가능요소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OECD의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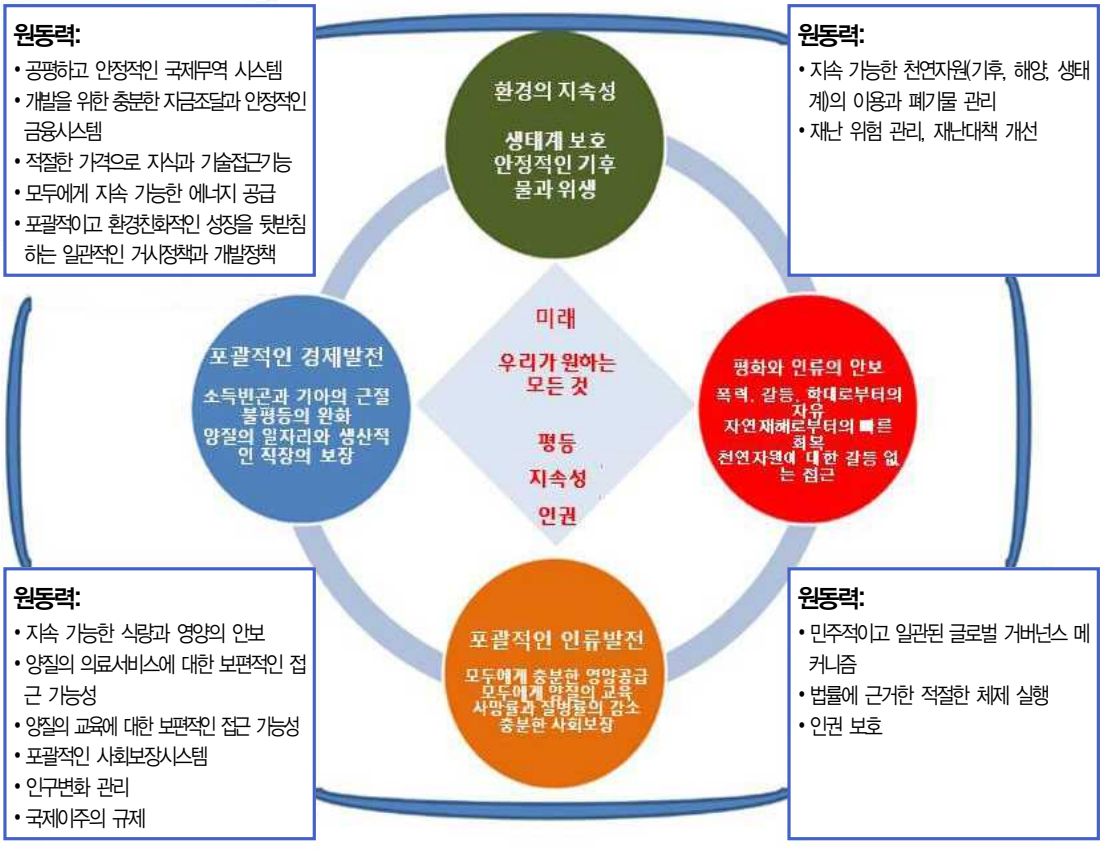
- 국가 통계시스템 강화
- 효과적인 기관의 설립과 재무책임시스템
- 평화 구축과 국가목표의 개발과 촉진
- 발전에 관한 정책의 일관성 보장
- 지식의 공유와 정책 논의, 상호학습에의 참여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파트너십의 촉진
- 금융개발의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측정과 모니터링

4.2.1. 국가 통계시스템 강화

협력국들은 OECD의 자문을 받을 때, 통계사무국의 역량 부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국가의 통계역량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국가의 통계역량이 강화된다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OECD는 데이터 제공자이면서 이용자인 '21세기 글로벌 통계발전 파트너십(PARIS 21)'을 설립한 기관의 하나이다. PARIS 21은 세계은행과 함께 통계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부산 통계 액션플랜 (BAPS)"을 개발하였다.

이 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통계가 의사결정과 완전 통합되어야 한다. 둘째, 통계에 대한 접근 자유가 권장되어야 한다. 셋째, 통계시스템을 위하여 자원 투입이 증가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정, 정책의 형성과 실행 과정이 잘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증거기반

그림 3 UN의 "미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통합적 틀



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APS가 제 4차 원조유효성 고위급 포럼에서 채택된 이후, 향후 십년간 글로벌 통계 발전을 주도할 것이고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과정은 국가 차원에서 Post-2015 개발협력의 체제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 필수조건이다. 이는 또한 Post-2015 개발목표를 수립하는 지침을 줄 수 있다. OECD는 BAPS의 시행을 지원하고 특히 Post-2015 개발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개발, 수집, 분석과 관련된 개념과 방법을 자문함으로써, 파트너 국가들의 통계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PARIS21은 '통계발전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의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예를 들면 통계 생산자·이용자의 논의)을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마이크로데이터의 문서화와 보급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PARIS 21은 새로운 개발협력의 체제를 형성하고 정책커뮤니티와 통계생산자의 이익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풍부한 경험을 활용한다.

4.2.2. 효과적인 제도 구축과 책임성 강화 시스템

경제성장 및 정책목표의 달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건은 효과적인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이들 기관들의 규칙과 문화가 기관의 책임성 수준과 투명성 수준을 결정하고, 동시에 아래 방향으로는 주민, 시민사회, 기업, 위 방향으로는 정책결정권자에 이르기까지의 반응 수준을 결정한다. 효과적인 기관의 설립은 개발목표를 지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를 지닌 사회는 경제성장에서부터 인류 발전과 사회적 응집력까지 여러 다양한 이슈에 잘 대응한다. 효과적인 제도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낮추고, 불확실성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 투명성, 부패 통제, 재무회계책임(accountability) 구조와 법의 규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립하고 거버넌스에 투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보 받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관을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전략 계획부터 개인의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성과지표와 목적 개선을 통한 전략 목적의 명확화
- 정책과 행정관리 계획에 대한 중간 관리층과 고위 관리층의 역량 강화
- 보다 효과적인 측정과 최고 회계감사기관(SAIs), 내부감사, 내부 관리와 독립적 회계와 중앙예산당국 보고 등을 통한 회계책임의 개선
- 과제의 정의와 해결에 있어 외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정책 일관성

과 수평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방성 강화
-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과정과 자원의 신축성 강화

개인의 여건과 각 공공기관의 역량이 다를 수 있지만, OECD가 마련한 기준은 각 국가들이 현행 운영방식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벤치마크를 제공한다. OECD는 효과적인 기관을 위한 지표개발에 있어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나?

- 예산 투명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포괄성과 정확성, 예산수립의 기반이 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 시간 경과에 따라 비교 가능한 지출항목의 분류화 등을 잘 평가하여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의회의 감독과 외부 감사기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공공 재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공부문의 조달이 순조롭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GDP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정부 조달에 있어 화폐가치가 유지되는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 법과 안보의 규칙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 사법기관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사회 정의, 폭넓은 범위의 정부 재무책임 등이 가능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 정부가 보다 통합적이고 개방적이면 개혁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할 수 있으며, 이해규제에 관한 갈등, 로비, 개방성, 정부 접근성 또는 시민참여 등과 같이 책임성(accountability)이 중요한 분야에 실행력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기관을 보다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버넌스 기관의 유효성과 포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침과 실천적 예시를 잘 제시하여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인적자원과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들은 주어진 의무를 실행하는 자원을 생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세금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국내세입을 발생시키는 공공기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의 원천이다. UN은 개발도상국이 M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UNDP 2010). 최근 몇 년간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절반은 세입규모가 GDP의 17% 미만이었다. 여러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더 낮은 세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빈국의 경우 위기로 국내 세입이 감축되어 주요 분야의 공공지출 부족 규모가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더욱 단순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세금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과제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하는 과제로는 첫째,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님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이전가격 규칙을 기획 실행하는 것, 둘째, 정보 교환제도의 개선, 셋째, 투명성의 증가 등이다. OECD의 많은 작업들은 개발도상국의 국내자원을 활용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세금: OECD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 등과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규범, 기준과 정책들을 운영한다. OECD는 이중 과세 뿐만 아니라 이중 비과세, 탈세 방지를 위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OECD는 최근 다국적 기업의 과세 기반 침식과 이익의 변화(BEPS)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세금과 개발에 관한 다중 투자자 대책본부는 국내 자원을 잘 유통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국제 세무규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함께 운영된다.
- 세수 통계: OECD는 재정성과와 관련된 데이터 및 비OECD 국가들과 조세와 공정성을 비교하는 세분화된 세입 데이터를 제공한다.
-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개발: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 한다: 불안정한 상품가격, 자원 기반의 급속한 소모와 자원추출 경쟁의 구축효과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하여 어떻게 효율적 조세와 공평 조세간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개발을 개선할 것인가.
- 공공부문의 재무관리: 이 분야에서 OECD는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공공지출 분야의 효율성, 유효성, 절약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모범사례의 분석 및 교육과 건강 등과 같이 생산적이고 사회개발의 성과와 경제성장과 구조전환에 대한 기여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2.3. 평와 구축과 국가 영성목표의 개발과 촉진

폭력과 분쟁은 모든 형태의 발전을 위협하며 특히 '취약 국가'에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취약한 나라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빈곤과 불평등, 취약한 지배구조와 낮은 단계의 경제발전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폭력과 분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취약한 상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오늘날 40개 국가와 15억 인구가 폭력, 분쟁, 취약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글로벌 과제이고, 세계 평화와

안보는 이런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Post-2015의 개발협력 체제에서 이런 폭력, 분쟁, 취약성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새천년선언(2000)은 이미 10년 전에 이를 인식했고, 최근 UN의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시스템 특별작업팀(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2012)이 작성한 보고서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슈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는 지난 십년 넘게 축적되어 왔다(예: 2011 세계개발보고서). OECD는 이와 같은 주요 개발 과제를 어떻게 Post-2015의 체제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인하여 '2012년 부산, 취약국가들의 뉴딜정책참여에 대한 개발원조 유효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2012 Busan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on a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에서 동의를 얻었으며 이는 이후 의제 진전의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고위급 정치문건은 평화구축과 국가체제구축을 위한 국제 대화(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가 작성하였으며 40개 국가와 기관들이 서명하였다. 이는 폭력, 분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운영 방식과 다양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운영방식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에 폭넓은 합의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른 우선순위는 합의가 이루어진 5개의 평화구축과 국가체제구축 목표(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 (PSGs))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목표들과 관련된 지표들은 어떻게 폭력과 분쟁이 Post-2015 개발협력의 체제에 반영할지를 이해시킨다. 평화구축과 국가체제구축을 위한 국제논의의 파트너로서 OECD의 분쟁과 취약성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OECD's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INCAF))는 취약국가의 뉴딜정책 참여를 넘어서 정책개발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어떻게 평화와 안보에 관한 목적, 목표, 지표가 보장되는지, 어떻게 Post-2015의 개발협력 체제가 효과적으로 발전의 주요 장애물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4.2.4.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보장

글로벌화의 결과로, 무역, 이민, 투자, 기후변화, 안보 및 기술 등과 같은 "원조 이외의"("beyond aid") 문제가 개발도상국의 미래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국은 자신들의 원조 정책을 넘어서, MDGs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의 과제를 개선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의 농민에게는 자국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시키면서 국제시장으로 수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 관한 OECD 의제에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이는 무역, 시장,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장벽이나 지식과 자본유출 등의 장애물과 같은 개발과 포괄적인 지속 성장을 제한하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국가 차원, 지역 차원 및 글로벌 차원에 있어 조정되고 일관된 정책은 UN 시스템 작업팀(UN System Task Team)이 작성한 보고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 가능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다.

OECD의 PCD 계획(OECD's PCD initiative)은 일관되지 않는 정책의 비용이 무엇이고 보다 일관된 정책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관련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 알려주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PCD를 촉진하고 보다 강력한 증거기반의 분석이 가능한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여러 나라들이 발전을 이루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권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PCD 지표, 방법론, 도구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OECD는 국제 PCD 플랫폼과 PCD 관련 지식의 공유와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전용 온라인 공간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은 식량안보, 불법자금흐름,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이슈의 분석에 PCD의 관점을 응용하는 한편,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글로벌 발전이 이루어지지 위한 PCD 조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4.2.5. 지식 공유 및 정책 논의와 상호학습 참여

UN 시스템 작업팀의 보고서인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가 강조한 바와 같이 가장 유효한 "발전이 가능한 원동력(enablers)"을 위한 청사진은 없다 오히려 지역 조건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OECD가 갖고 있는 증거기반의 분석, 정책 논의, 동료의 평가와 학습과 같은 경험은 특수 상황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정부의 개혁이 잘 설계·실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비회원국과의 동료 학습을 위한 포럼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OECD는 파트너 국가의 동료 학습 네트워크와 학제간의 정책 전문지식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지식 공유 연대(Knowledge Sharing Alliance)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파트너 국가의 역량과 OECD의 지식, 정책, 기구, 틀,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파트너 국가와 공동으로 교훈을 학습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연대는 파트너 국가들의 여건에 적합하고 개발수요에 유효한 분석을 위하여 파트너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지식공유연대(Knowledge Sharing Alliance)는 "발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원동력" (development enablers)을 확인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영향을

촉발시키고 정부역량과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개발 전략(Strategy on Development)의 후원 아래 설립된 정책입안자와 실무자의 네트워크가 있다. 이런 네트워크들은 OECD국가나 비(非)OECD국가 그룹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발과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취약성 관리, 조세제도 개선, 다양성 촉진, 지역공급자 개발, 투명성과 거버넌스 향상 등과 같이 자연자원 중심의 개발 방식과 관련된 과제
- 글로벌 가치사슬 및 혁신 촉진과 업그레이드, 고용 증진 등과 같은 기업의 통합과 관련된 과제들

OECD는 개발도상국에 더욱 효과적이고 상생 협력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한 가지 예는 다원적 국가평가(Multi-Dimensional Country Review, MDCR)이다. 오랜 기간 OECD는 경제발전, 환경, 교육과 기술, 투자, 개발 원조, 농업, 에너지, 혁신 분야 등을 중심으로 OECD 국가들의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왔다. 일부 비OECD국가들도 이런 정책 평가에 이들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다. 이런 다차원 평가는 정책의 상호 작용과 일관성을 포함하여 비회원국의 경제 사회발전의 제약조건을 종합 진단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MDCR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장, 평등, 지속가능성 등 3가지 수단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심도 있는 진단을 통하여 발전의 제약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교차분석 평가에서는 분야별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개발의 광범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 기술, 녹색성장 및 사회정책에 있어 축적된 OECD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이들 평가는 개발도상국이 발전전략을 잘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들 발전 전략 목표에는 글로벌 목표와 특정 국가의 국가 목표가 포함된다.

4.2.6. 효율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촉진

양자 기관과 다자기관들,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을 포함하여 개발협력 파트너 간 시너지가 향상될 필요가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모든 작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인 MDGs 8번째 목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의미 있는 도전과제로 남아 있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자연적 합헌기구나 발전을 추진하는 협력체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2011년 한국 부산의 제4차 고

위급 개발원조포럼은 개발협력과 파트너십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새롭고 포괄적인 방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산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신흥경제국을 포함하여 160개국의 동의를 얻었고 국제기관, 시민사회, 민간부문, 의회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더 깊은 정책 협력을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OECD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는 각기 발전단계가 다른 3개 국가의 장관급 공동의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OECD와 글로벌 파트너십과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Post-2015년 개발의 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 UN의 발전프로그램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개발협력과 유효성 제고와 관련된 정치 논의, 재무책임 증진 및 지식 공유의 공간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은 Post-2015 개발 체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의 일환으로 개발협력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 Post-2015 개발협력 체제 내의 개발협력에 관한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증거기반을 개발하였다.

OECD는 개발협력에 관하여 수십 년간의 데이터 수집과 철저한 자료 분석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하여 개발 전략(Strategy on Development)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합의한 효과적 원조를 위한 국제규약을 점검하는 노력을 이끌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개발협력 개선 노력을 자문해 주며 여러 회원국들은 원조효과성에 대한 현재의 약속한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다른 나라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으로 활용될 수 있고 2015 개발협력의 체제 이후(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의 개발협력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2.7. 개발 재원의 측정과 모니터링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개발자금은 매우 다양한 재원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다. OECD는 다년간 ODA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자원 흐름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재원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과 분류 등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OECD는 Post-2015 개발의제에 필요한 외부로부터의 개발재원규모를 측정하고 점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 재정의 변화는 모든 자금

원천에 대한 분석을 촉진하고 모든 재정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과 통계적 구분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여기에는 글로벌, 지역적, 부문별 수혜자 개발재정 및 관련 통계치의 제공과 원조기관 노력에 대한 비교분석이 포함된다. OECD는 OECD 비(非)회원국, 다자간 개발기관, 민간재단, 영리 또는 비영리 개발재정을 포함하여 폭 넓은 개발협력의 제공자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분석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UN, IMF, 세계은행 및 기타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서 OECD의 개발협력위원회는 곧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발재정에 관한 기부자들의 노력과 수혜자들의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확인할 것이다.

5. 마무리

OECD의 이번 개요 보고서는 Post-2015 개발협력에 대한 OECD 국가들의 기여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시리즈이다. 동 보고서는 MDGs의 최종기간인 2015년 이후에 글로벌적, 총체적으로 측정가능하고도 의미 있는 국제개발협력체제의 구축에 기여 할 것이다. 동 보고서는 글로벌 차원과 개별국가 차원(2개 차원)의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계속 발전하는 아이디어는 OECD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에서 반영된 OECD의 확약 '회원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 함께 참여하고, 상호학습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각국의 고유 개발소유권(their own development ownership)을 존중하고, 그리고 발전에 관하여 더욱 일관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보고서는 OECD의 다양한 전문지식, 경험 및 여러 비교우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MDGs의 후속체제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때 합의될 것이다. 따라서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진행과정에 최대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 제안서는 토론과 제안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는 OECD의 독점적 기여를 언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OECD가 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보고서는 여기서 언급한 11개 요소를 반영한 다른 OECD 부서의 협조 하에 추후 제시될 예정이다.

참고 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2014. *Beyo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wards an OECD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agenda.* OECD. (http://www.oecd.org/dac/POST-2015%20Overview%20Paper.pdf).

Alkire, Sabina, and James Foster. 2011a.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IFPRI oc63ch03. Also i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7). pp. 476-487.